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음 8월 21일) 제19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추석연휴 동안 도내 5대범죄 ↓

▶ 전북경찰청 집계결과

51건으로 전년대비 67건 감소
살인·강도사건 한 건도 없어

연휴동안 추진 특별치안대책
전년대비 사건 감소 효과 거둬

10여일의 길었던 추석 연휴 동안 전년대비 5대범죄 사건이 절반이상 감소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기간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5대범죄는 모두 51건으로 전년대비 67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살인과 강도 사건은 한 건도 없었으며 절도 1건과 폭력 6건을 제외한 사건들의 용의자를 검거해 86.2%의 검거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 기간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이 택시기사와 협박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2일 남원시 주생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검거됐다.

또 지난 5일 군산에서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B씨가 상습 폭력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출소한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지난해 대비 사건이 감소한 것은 경찰이 연휴 동안 추진한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연휴기간 빈집·수확물 절도, 강도, 가정폭력, 주취폭력 등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연휴 전부터 보안시설이 취약한 금융시설 등에 대해 범죄예방요령 홍보와 함께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탄력순찰을 실시하는 등 자율방범대와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와 합동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평온한 추석명절을 위해 경찰관을 총동원하여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 긴 연휴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추석 연휴 마지막,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서해안고속도로 금강대교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행선에 차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글 창제 뜻, 민주주의 정신과 상통”

문 대통령, 한글날 571주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SNS 시대에 한글의 위대함이 더욱 빛난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한글"이라며 571돌 한글날 메시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리며 "한글의 과학성은 오늘날 컴퓨터와 휴대폰의 문자입력체계의 우수성으로 또다시 증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71년, 말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간절함을 헤아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글의 가장 위대한 점은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다"면서 "민백성 모두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누구나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것,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과 통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시스

전북도내 인구 순유출 속 초중고교생은 외려 증가

최근 5년간 초중고생 587명 타 시·도에서 전입

김승환 교육감 "전북 교육수준 낮지 않다" 주장

전북에서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은 이른바 인구 순유출 현상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 이동은 이와는 정반대로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여러 분야 여건이 대부분 열악하지만 적어도 교육 분야만큼은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이 국가통계포털과 도교육청의 NEIS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인구 및 학생수 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2~2016년)간 1만5504명의 초·중·고생이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학생수는 1만4917명으로 집계돼 587명이 순유입했다.

연도별 학생 순이동은 2012년 158명, 2013년 222명, 2014년 289명으로 순유입 숫자가 지속적으로 커졌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8명, 54명이 감소해 전출이 약간 많았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순유입 증가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전북의 인구 유출 규모와 비교하면 초중고 학생의 전북으로의 전입은 여전히 유의미한 숫자다. 실제 이 기간 타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인구수는 34만7003명이었는데 전출 인구수는 36만2313명이었다. 5년간 순유출 규모가 1만5310명으로, 연평균 3062명의 인구가 전북을 떠나 타 시도로 빠져나간 셈이다.

연도별 인구 순이동은 2012년 3291명, 2013년 2197명, 2014년 2563명, 2015년 2830명, 2016년 4429명이 각각 줄어 전입 인구대비 전출 인구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와 관련 "공직자 등 일각에서는 도민들이 전북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출이 많은 교육 수준을 꼽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증명됐다"면서 "자신들의 실정과 무능을 교육 탓으로 돌리는 일부 공직자들은 이번 기회에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안전불량 전기자전거 내년 3월부터 통행시 과태료 4만원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안전확인신고가 돼야 한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이며, 전기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하며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

크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함께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과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총면적의 5%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학교를 품은 마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

전라북도

교육특구 2017 포럼

혁신·농어촌·방과후학교

2017. 10. 16. (월)

| 13:00~18:00 |

▶ 오펠리스 웨딩홀

- ▶ Session 1. 지역의 성장, 학교와 마을이 함께 꿈꾸다
- ▶ Session 2. 교육특구로 지역과 함께 풀어나가는 고등학교 정책
- ▶ Session 3. 방과후활동,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